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요약 |

-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가 결정된 후 미 대선은 박빙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한국은 산업 및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할 필요
 - 무엇보다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무역법이 우리 산업과 미국시장 공략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미 간 통상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통상정책을 예측하는 데 주요한 근거
 - 당시 현안으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 (트럼프 2기 시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의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우선 대응 전망
 - 미국 보수 정가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치로 인해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USRTA)을 도입해 무역 상대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입 관세 부과 가능
- (우리의 대응방안) 트럼프 2기 등장 시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해올 수 있음.
 -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 요구 및 관련한 통상 압력에 대비할 필요
 -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제품에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동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이 증가할 전망
 - 그 밖에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1. 서론

-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스와 공화당의 트럼프 양 진영은 통상 및 대내외 경제정책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 중
 -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대중 디리스팅, 다자간 및 동맹·파트너와 협력 강화,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친환경 기조 유지 전망
 -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 강화, 대중국 압박 심화, 관세 인상,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양자 협상 추진 등이 예상
-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및 대내외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지난 4년과 비교하여 정책 추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인프라법, IRA(인플레이션감축법), CHIPS법(반도체법)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공조 등을 통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정책 추진 전망
- 한편,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미국 이익 중심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대중국 압박 수위는 전례 없이 높아질 전망
 - 수입 상대국 전반을 대상으로 한 10% 수준의 보편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고율관세 및 최혜국대우(MFN) 철폐 등을 공약
 - 특히 트럼프 2기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와 같은 대표적 반중 및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내각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
- 미국 대선은 박빙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성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트럼프가 공약한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¹⁾와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등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트럼프가 당선되는 상황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
 -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및 통상 정책을 추진할 전망

1) 보편적 기본관세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트럼프 1기 한·미 간 통상현안

■ 미국의 TPP 탈퇴와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검토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집권과 동시에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함.
 - 특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를 열겠다는 통상정책 방향을 밝힘.
- 미국이 TPP를 공식 탈퇴한 이래 남은 11개국은 2017년 1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에 합의하고, 2018년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발효
 - CPTPP는 기존 11개국에 더해 영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총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등을 통해 참여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

■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 2018년 1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발표함.
 - 우리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하고, WTO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전달

〈표 1〉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WTO 판정 결과

쟁점	패널 판단	결과
수입증가 및 산업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GATT 제19조)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협정상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GATT 제19조 요건 불충족	승소
산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증가가 있었는지	수입물량 증가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	승소
국내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수입산 부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국산 부품 생산자를 국내산업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	승소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벨트 구동형 세탁기 생산자의 이윤자료를 산업피해 분석 시 미고려한 것은 부적절	승소
인과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하였고, 수입물량과 산업피해 추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	승소
절차적 쟁점	△ 세이프가드 관세가 수입산-국내산 세탁기 간 가격 차이보다 크다 하여 조치가 과도하다 볼 수는 없음(패소), △ 미국의 조치채택 관련 통지는 합리적 기간 내 이뤄짐(패소), △ 미국은 한국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미제공(승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2. 9),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에서 인용.

- 약 4년 후인 2022년 2월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룬 분쟁에서 실제적 쟁점 5개 중 5개, 절차적 쟁점 3개 중 1개에 대해 한국이 승소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²⁾**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 부과
-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잠정 제외(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미국안보협력국(any country with which US has a security relationship)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동 관세 경감 또는 면제
- 품목별 예외 관련, 미국 상무부가 10일 내에 세부 절차 발표
- 동 조치는 서명 15일 후인 3월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8. 3. 9),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에서 인용.

- 이후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 차원에서 EU와 일본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하였고, 영국과도 개정 협상을 진행
-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 정부에 개정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

〈표 2〉 주요 국가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및 개정 협상 결과

	한국	EU	일본
쿼터 물량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268만 톤)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5%(330만 톤)	2018~2019년 연평균 수출량(125만 톤)
쿼터 초과 시	수출 불가	25% 관세 부과 조건으로 수출 가능	
분기별 쿼터	미소진 물량 이월 불가	4% 한도 내 이월 가능	
쿼터 조정	불가	전년도 미국 철강 소비량이 2021년보다 6% 초과 시 3% 증량, 6% 미만 시 3% 감량	
추가 협의 여부	추가 협의 의무 없음	상대국 요구 시 협의 응해야 함	
진행 상황	개정 협상 요구 중	2022년 1월 발효	2022년 4월 발효

자료: USTR, “Announcement of Actions on EU Imports Under Section 232”, October 31, 2021; US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MENT OF ACTIONS ON JAPANESE IMPORTS OF STEELS UNDER SECTION 232”, February 7, 2022를 바탕으로 작성.

2) 우리나라는 232조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기간의 연평균 수출 물량의 70% 수준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Absolute Quota)’를 수용함.

- <표 2>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해 2021년 10월 EU, 2022년 2월 일본과 체결한 개정 협상의 주요 내용임.

■ 한·미 FTA 개정 협상

- 미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민국 무역적자 문제를 지속 제기했으며 당선 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
 - 개정 협상은 총 세 차례 진행되었으며 1~2차 협상은 상호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3차 협상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을 모색하여 2018년 3월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
 -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보면 한국은 ISDS 개선, 무역구제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문제였으며, 미국은 자동차 관세 및 안전과 환경기준,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과 같은 이행 이슈에 관심을 보임.

<표 3>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요 내용

한국		미국	
분야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ISDS	- 투자자의 ISDS 남용 제한 및 중재절차 신속 종료 -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자동차 관세	-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차 철폐(2021. 1. 1 철폐)에서 추가 20년(2041. 1. 1 철폐) 연장(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
무역 구제	-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를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자동차 환경기준	-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 기준(2021~2025)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하고 소규모 제조사 제도 유지
섬유 원산지	-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 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 시 역내산으로 인정	자동차 안전기준	- 연간 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준 2만 5,000대)
		이행이슈	- 개정을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 조항과 합치 -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 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인용.

3. 트럼프 재집권 시 예상되는 미 통상정책의 방향: 미국 상호무역법을 중심으로

- 현재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재집권 시 통상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
 -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작성한 것으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집권 시 정책 방향을 기술
- 보고서에서 무역을 다룬 부분은 26장(“Trade”)으로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와 켄트 라스만(Kent Lassman)이 각각 작성
 -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을 역임하며 중국 등에 강경한 보호무역정책을 주도
 - 켄트 라스만은 미국의 시장주의 경제연구소인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CEI) 회장으로 자유주의 진영의 보수적인 무역 정책 지지
 - 이들 두 시각은 미국 보수 정가의 통상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대변

〈표 4〉 “2025 Mandate for Leadership” 26장의 주요 내용

저자	주요 내용
Peter Navarro	- (1)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WTO 체제로 인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미국 상호무역법 입법화 주장 - (2) 경제적 강압, 물리적 및 사이버 기술 탈취, 정보 수집, 정부 주도 기술 추구형 투자 등을 통한 중국의 경제적 공세에 대한 견제
Kent Lassman	-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관점 대변 - 무역법 232, 301조 관세 폐지, 공급망에서 불필요한 규제 제거, 우방국과 상호 인정 정책 수립, 존슨법 폐지, WTO 분쟁해결절차 복원, TPP 재가입 및 IPEF의 통상 부문 강화 등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2025 Mandate for Leadership”.

-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및 주위 인사들의 강경하고 공세적인 통상정책 관련 발언과 공약을 볼 때 피터 나바로가 대표하는 입장이 트럼프가 재집권 시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
- 피터 나바로가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 WTO 체제로 인한 현재의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 체제로 인해 늘어나는 미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대응과 (2)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
 - (2)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AI 등의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 견제 정책과 큰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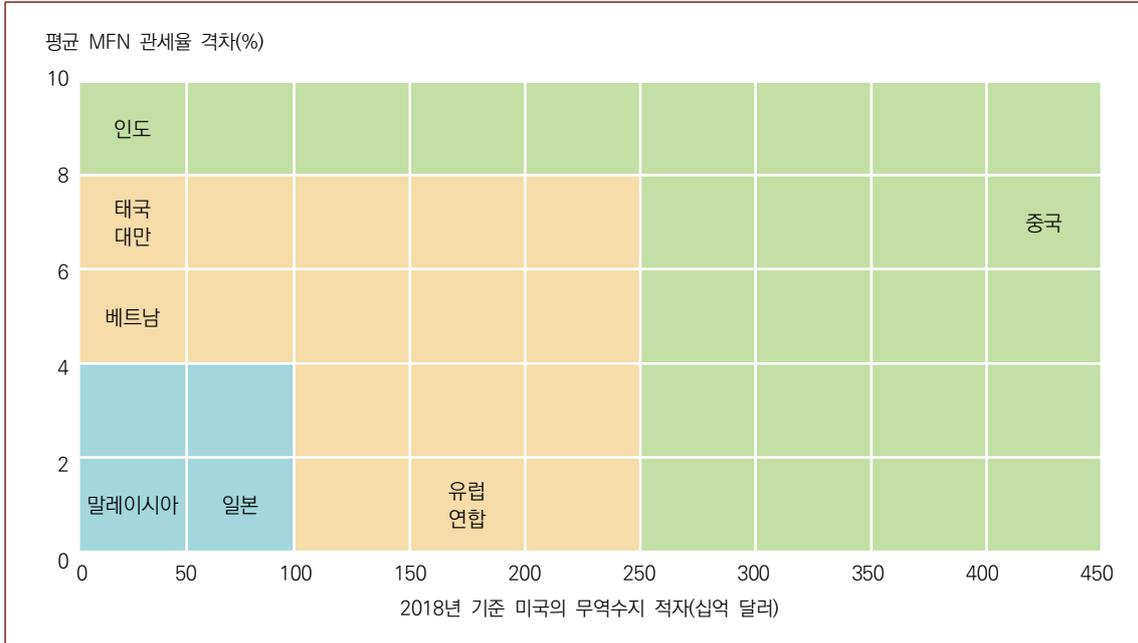
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결국 (1)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구별되며,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과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변화가 생길 부분으로 주목할 지점
- WTO하 최혜국대우 세율(MFN)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미국이 많은 국가의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의 수입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미국이 겪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예컨대, 미국이 적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MFN 관세는 2.5%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10%), 중국(15%), 브라질(35%)의 수입 관세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쌀 수입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율이 비대칭적으로 설정
 -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보면, HS 6단위 기준 외국이 미국보다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46만 7,015건으로 반대의 14만 1,736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수입 관세율 격차도 외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가 반대 경우보다 크다고 문제 제기
- 이로 인한 미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USRTA)의 도입을 제안
 - USRTA는 2019년 공화당³⁾에서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며, 트럼프는 재집권 시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을 시사
 - 미국이 부과하는 수입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국이 협상을 통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거부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인상할 권한을 가짐.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USRTA 도입 시 협상을 제기할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들이 어디인지와,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부분
 - 나바로는 ①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②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을 나열하는데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
 - 그 밖에 인도가 미국과 수입 관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는 점이 지목
 - USRTA가 도입될 시 미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① 미국보다 높은 수입 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가 미국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와 ② 반대로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상응해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⁴⁾

3) Sean Duffy 하원의원(위스콘신) 대표 발의.

4) 세계은행의 SMART 관세 시뮬레이터를 사용.

〈그림 1〉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무역수지 적자규모와 관세율 격차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 772.

- 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대부분 국가에 대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더 큰 무역수지의 개선이 나타난다고 제시

〈표 5〉 시나리오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변화 시뮬레이션

국가	시나리오 1 (무역 상대국이 수입 관세 인하)		시나리오 2 (미국이 수입 관세 인상)	
	무역수지 감소	2018년 미국 무역수지 기준 비중(%)	무역수지 감소	2018년 미국 무역수지 기준 비중(%)
인도	5.0	24	18.7	88
대만	1.0	6	9.2	59
베트남	0.7	2	17.2	44
태국	3.2	17	6.4	34
중국	18.5	4	70.6	17
유럽연합	8.0	5	25.3	15
전체	35.4	4	45.6	5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 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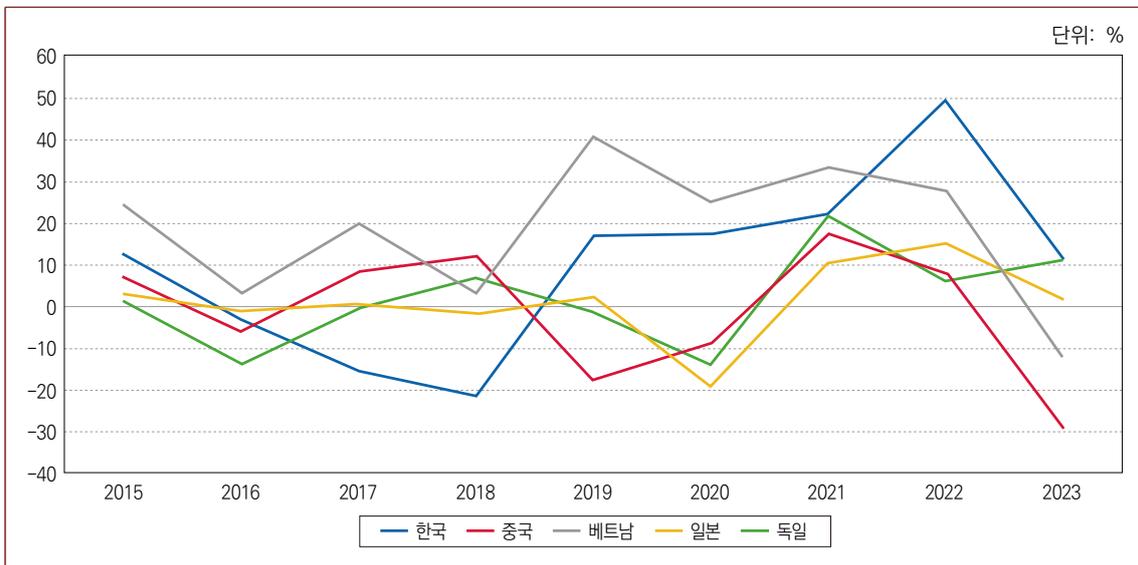
4.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 트럼프 2기 등장 시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전쟁의 주요 전장이 된 1기와 달리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 인하 압력 또는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 예상
 -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부터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재편되면서 해당 국가들, 특히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보수 정가에서는 중국, 유럽연합뿐 아니라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신흥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개선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인도/동남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망 구조도 약화 우려
-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 장벽 또는 제한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해당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중국산 원료 및 중간재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압박 가능성
 -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자와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대외 수출 가운데 약 21%가 대미국 수출로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고,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약 25%이며 이들 대부분이 원료 및 중간재라는 점에서 주의 필요⁵⁾⁶⁾
 - 따라서 이러한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 및 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통제 조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중국산 품목에 대한 리뷰 및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통상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기준으로 미국의 연평균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458억 달러로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 1조 2,135억 달러의 약 3.8%를 차지

5) 최정환·김바우·김정현(2024), “베트남 진출 한국계 및 일본계 기업의 국제무역구조”, 『국제경제연구』, 제30권 3호, pp. 57-79.
 6) 트럼프 1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통상 분야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또한 최근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No Trade is Free)’에서 베트남을 통한 중국제 상품의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지적하며 베트남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USMCA(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그러나 최근 3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음.
- 또한 2019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그림 2〉 주요 교역 대상국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변화율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따라서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재개정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승용차를 중심으로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대비할 필요
- 그 밖에도 미국 측 무역수지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 측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리뷰 필요⁷⁾

7) 트럼프 1기의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의 대중국 수입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전에 적게 예상된 품목들이 실제로 수입 관세 인상의 대상이 된 경우, 더 큰 폭의 대중국 수입 감소를 경험한 것을 관찰할 수 있음. 최정환(2024), "Revisiting the US-China Trade War: The Role of Trade Policy Uncertainty", work in progress.

〈표 6〉 주요 상품의 2019년 전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비교

단위: 십억 달러, %

HS Code	품목 설명	2019년 이전	2019년 이후	변화율
870323	승용자동차(1,500-3,000cc)	-46.95	-37.54	-20.05
847330	자동차료처리기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11.92	-27.92	134.18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09	-19.04	365.77
870322	승용자동차(1,000-1,500cc)	-10.53	-18.91	79.63
870324	승용자동차(3,000cc 초과)	-12.54	-18.64	48.67
271019	기타 석유, 역청유 제품	-12.38	-15.66	26.55
870340	승용자동차(기타)	-1.61	-9.04	461.76
841810	일체형 냉장·냉동고	-4.98	-8.43	69.3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7.48	-7.06	-74.30
870899	기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5.36	-6.19	15.51

자료: Global Trade Atlas를 토대로 저자 작성.

김수동 통상전략실 | 연구위원 | sdkim@kiet.re.kr | 044-287-3263

최정환 글로벌산업실 | 부연구위원 | choijeo86@kiet.re.kr | 044-287-3101

